

# 光州日邦



전남지사  $13 \sim 15$ 일, 광주시장  $15 \sim 17$ 일

# 민주 '경선전쟁' 시작

## 광주 구청장 4.8대1 경쟁 광역·기초의원 등 공천심사 평화당 등 야권은 인물난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오는 13~15일 마무리하고 광주시장 경선 일정을 잠정적으로 15~17일로 결정하는 등각 정당들이 이달 중 본격적인 공천·경선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에 후보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 이에 맞서는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후보자수와 선거인단 규모 등을 고려해 4차례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은 오는 13~15일 본경선을 진행하고, 결선투표는 18~19일 열린다. 또 광주는 15~17일 본경선을 거친 뒤 20~21일 결선투표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선 후보들에 대한 컷오프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일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전남지사 경선은 권 리당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를 실시한 뒤 각각 50%씩 반영하고, 본경 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 선투표를 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한 때 7명에 달했던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윤장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간 3자 단일화를 거쳐 일단 강기정 단일 후보와 양향자, 이용섭, 이병훈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컷오프 결과에 따라 본경선에 나설 후보의 수는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김영록 전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 등 3명이 경선을 벌이게 된다.

후보가 많은 민주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인물난으로 여전히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 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중앙 당 차원에서 일부 후보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4월 중순께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를 발 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평화당도 민주 당의 경선 후보가 정해진 뒤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오는 12일까 지지방선거 후보자를 1차 공모하고 있다.

또 정의당에선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 표가, 민중당에서 윤민호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이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

#### ■ 민주당 시도지사 경선일정

경선기간:4.11(수)~4.24(화)

구분	지역	경선기간	
		본경선	결선투표
1차	충남·충북	4.11~13	-
	대전		4.16~17
2차	전북·제주	4.13~15	-
	전남		4.18~19
3차	인천·대구(광주)	4.15~17	4.20~21
4차	서울·경기	4.18~20	4.23~24
※ 후보자수, 선거인단 규모 고려 4차로 구분			

#### 장을 던진 상태다.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전남지사 후보를 내기 위해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중당은 민노총 기획 실장 출신인 이성수 예비후보가 이미 표밭 을 누비고 있다. 정의당은 조만간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전도 뜨겁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경선 후보 신청자 142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갔다. 경선후보 신청 마감결과 5곳의 구청장 공 모에는 2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시의원 후보 공 모에는 20개 선거구에 46명의 후보자가 신 청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개 자치구 20개 선거구에서 59명을 선출하는 자치구의원 공모는 72명의 후보가 등록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 면접은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별로 6~7일 집단면접 방식으로 치러진다. 광역의원은 9~11일 발표 10분·토론면접 20분 형식으로, 기초단체장은 15~17일 발표 20분, 토론면접 40분 형식으로 치른다.

광주시당은 경선 후보자 심사결과를 오는 19일에 발표하며, 선거구별 최종경선투표 일정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오는 7일 단수 후보지역과 청년·여성지역 심사 및 면접을 한다. 8~10일에는 복수 후보 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심사 및 면접을 한다. 오는 16일까지 단수 후보자와 경선 후보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 방식은 기초단체장의경우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선거인단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밤바다 밝힌 해상 분수 '빅오쇼'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분수쇼인 '빅오쇼(Big-O Show)'가 5일 오후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빅오쇼는 오는 11월17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7시 50분에 진행되며 세계화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버전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 도시공원 2단계 개발 '막무가내 추진' 잡음

### 광주시 "일정 촉박 4월 공모"…13일 민관거버넌스서 가닥 시민단체·전문가 반발 예고 속 추진방식 등 논란 불가피

중앙·일곡·중외 등 광주의 대표 공원이 포함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발계 사업에 대한 향방이 오는 13일 열리는 민관거버넌스 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

광주시가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일 몰제 도입까지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2단 계 제안서 공모를 4월로 못박고 있어 국 토교통부 추후 발표 신규 지침 반영, 공원 매입을 위한 재정 투입 계획 공표, 공공개 발 우선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 회단체, 전문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제 안서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협상 완료 및 주민설명회,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심의, 토지매입 등을 위해서는 최소 27개월이 필요로 해 4월 공고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원조성비 부담을 없애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상 비공원시설(개발) 면적을 30%에서 10% 미만으로 낮춰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 심사기준이 국비 지원, 지방채 추가 투입, 공기업 참여를 통한 공공개발 등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고층·고밀 아파트 조성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심사기준이 아파트 시공 실적을 중시한데다 민간건설업체와 공기업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어 공공성을 우선해야하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기업(건소시엄포함)은 건설업체와 같이 공원(구역) 1곳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채 추가 발행 여부를 협의하고 있으며,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철도 2호선 의 시기·방식·규모 등을 조율할 경우 도 시공원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도 시가 공원 보존 및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 2단계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일곡·중외공원 등광주의 상징성이 큰 대규모 공원의 경우공광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분리하는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공모에의한 방식'이 아닌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하면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입후보자들도 모두 2단계 사업 연기 및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가동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거버넌스는 시민단체 4명, 시의회 2명, 대학교수 4명, 전문가 2명, 내부위원 4명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16차례회의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을협의하고 있다.

I야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iu.co.kr

## "국민투표법 개정해 달라" 文대통령 금명 국회에 서한

문재인 대통령이 금명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국회 연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두고 보자"고 답했다.

투표인 명부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 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 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 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 회에 촉구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